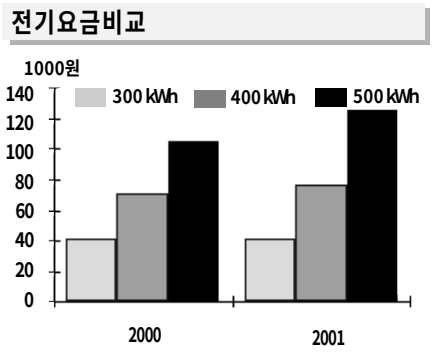
전기요금 누진제와 언론개혁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가정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이 실제 사용량 증가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누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논란인지, 아니면 누진제의 부담이 커 줄여달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 사치와 낭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반향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2001년 1-6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197억4000만kWh로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반면,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은 2조155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2000년 1-6월 kWh당 104.3원이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01년 1-6월에는 109.2원으로 4.7% 올랐음을 의미한다. 일반용 전기요금이 kWh당 101.5원에서 103.5원으로 2% 상승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2배를 넘고 있으며, 산업용도 kWh당 55.7원에서 59.1원으로 6.1% 올라 인상률이 컸다. 더군다나 에어컨 사용 가정이 늘어나면서 강화된 누진제 적용 가구가 급증할 2001년 여름이 지나면 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맞는 말이다. 산업자원부가 2000년 11월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전기 소비량이 월 300kWh 이하인 가정은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해 쓰는 가정에 대해서만 사용량별로 6.3-28.9% 인상하는 내용으로 누진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전체 가구의 8.8%만 연평균 300kWh를 초과 사용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별로 없으며, 누진제 강화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평균 3.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맹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00kWh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가구가 8.8%에 불과할 것으로 보았으나 하절기에는 2배에 가까운 15.6%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실제 간과했는지, 많은 가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낮춰 발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화하지 않고 예전대로 적용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누진제를 강화했어도 너도나도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이 아니던가? 한국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여유가 많아져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날 수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은 그러할 때가 전혀 아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던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소득이라야 기껏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외환부족 및 경쟁력 약화로 IMF의 구제금융에 의지해 살아난 지 2년 남짓한 나라에서 자동차 때문에 업무차질을 빚는 것은 고사하고 불이 나도 그대로 타죽어야 하는 현실도 부족해 이제는 에어컨 바람이 그리워 수조원이 들어가는 발전소를 무한정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화한 것은 고유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맞는 말이다. 사치와 낭비로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적 판단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 사이비언론들은 근검절약으로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사치와 낭비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언론을 개혁해야 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가진 자의 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촌지와 협박으로 뜯어낸 검은 돈으로 중산층인 양 행세하는 더러운 언론인들이 세상을 조율하고 있으니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파탄을 넘어선 지 불과 2년이 안돼 또 다른 파탄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반란군을 영웅이라도 된 듯 치켜세운 대가로 각종 특혜를 누리며 살아왔으니 충분히 그러하리라고는 생각된다.

언론개혁은 국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